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5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서범수 · 김선교
인요한 · 김석기 · 강대식
박덕흠 · 권영세 · 박준태
강명구 · 김성원 · 유상범
곽규택 · 정점식 · 김도읍
최수진 · 김장겸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·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,456명이며, 전시납북자로 심의·의결한 건은 총 4,777명에 달함.

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반하여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

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·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.

이에 6·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).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
다.

7의2.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
7의3. 6·25전쟁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의2에 따른 위로금 또는 제
8조의3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

7의4. 그 밖에 6·25전쟁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로금) ① 6·25전쟁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는 피해의
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. 이 경
우 가족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 중 납북자의 자녀와
형제자매로 한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(의료지원금) 위원회는 6·25전쟁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족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 중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한다.

제8조의4(위로금등의 지급신청) 6·25전쟁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(이하 “위로금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의5(결정서의 송달)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제8조의6(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
제8조의7(소멸시효)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8. (생략) ③·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7의2.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</u> <u>7의3. 6·25전쟁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의2에 따른 위로금 또는 제8조의3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</u> <u>7의4. 그 밖에 6·25전쟁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8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<u>제8조의2(위로금) ① 6·25전쟁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가족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</u>

<신 설>

중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(의료지원금) 위원회는 6

· 25전쟁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족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 중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한다.

<신 설>

제8조의4(위로금등의 지급신청) 6

· 25전쟁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(이하 “위로금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조의5(결정서의 송달) 위원회</u> <u>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</u> <u>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</u> <u>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</u> <u>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</u> <u>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조의6(위로금등을 지급받을</u> <u>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른 위</u> <u>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</u> <u>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</u> <u>류할 수 없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조의7(소멸시효) 이 법에 따른</u> <u>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</u> <u>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</u> <u>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</u> <u>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</u> <u>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다</u> <u>만,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</u> <u>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</u> <u>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</u> <u>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</u> <u>효가 정지된다.</u></p>